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

2009년 3월

## 개원 31주년 맞아 “주인의식 갖고 목표 향해 진력”



개원 31주년을 맞아 전직원은 주인의식을 갖고 목표를 향해 진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우리 연구원은 3월 31일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원 31주년 기념행사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목표를 향해 진력하는 데 뜻을 모았다.

개원기념식은 장기근속직원과 우수과제, 특별공로 표창에 이어 오세익 원장의 기념사, 한국종합예술대학교 박재희 교수의 초청 강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오세익 원장은 개원 기념사를 통해 그동안 이룬 연구원의 성과를 직원들의 땀의 결실이라고 평가하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오 원장은 취임하며 제시한 비전과 5대 발전전략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나 앞으로 내실 있는 성과와 시대적인 소임을 완수하려면 우리 모두 비전을 공유하고 하나로 뭉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주인의식을 갖고 소임을 다해 주길 당부했다. 산적한 농업·농촌 문제와 연구원의 현안도 전직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하나가 되어 중석몰축(中石沒鏝), 유지경성(有志竟成) 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잠재력을 발휘하여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30년 근속한 옥치목 선임관리원과 김영섭 2급관리원, 20년 근속한 김명환 선임연구위원, 10년 근속한 성진석 2급관리원에게 포상이 주어졌고, 특별공로상은

조명기 연구위원, 이금선 전문연구위원, 효행상은 허주녕 전문연구위원이 받았다. 우수연구과제에 대한 포상도 있었는데 최우수과제는 '식품관련 법체계 개편을 위한 기초연구'(이계임 연구위원), 우수과제는 '신

규 취농의 진입장에 해소방안(마상진 부 연구위원), '동아시아 FTA 대비 농업부문 연구'(최세균 선임연구위원),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를 위한 정책 재편 방안(2/2차)'(송미령 연구위원), '전업농의 위험관리 방안 연구'(황의식 연구위원), 공로과제는 '세계농촌사회학 국제학술대회 등 개최·운영'(허창 연구위원)이 각각 받았다.

개원기념식에 이어 한국종합예술대학교 박재희 교수를 초청 특별강연을 하였다. 박교수는 '손자병법과 생존전략'이란 주제로 조직문화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강의했다. 특히 개원기념식과 연우회 총회에 허신행 5대 원장, 정영일 6대 원장, 박상우 7대 원장, 강정일 8대 원장, 이정환 9대 원장과 50여 명의 연우회원들이 참석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 FANEA 제6차 국제심포지엄 개최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 국제심포지엄이 3월 4일(수) 일본 농림수산정책연구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우리 연구원과 일본의 농림수산정책연구소,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가 공동 주최하여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6회째를 맞이하였다.

금년도 심포지엄에서는 『농촌지역진흥과 농업』, 『국제농산물 수급 동향』을 주제로 선정하여 각 주제별로 분과를 나눠 한·중·일 관계자가 논문을 발표했다. '농촌지역진흥과 농업'이란 주제 하에서 열린 분과에서는 우리 연구원 성주인 전문연구위원이 '한국의 농촌지역과 농촌정책'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국제농산물 수급 동향'이란 주제로 열린 분과에서는 우리 연구원 김태훈 부연구위원이 '국제곡물가격 급등이 한국에

미친 영향'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주제 발표 후, 한·중 연구기관의 기관장이 각각 좌장을 맡아 깊은 토론을 하였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동필 선임연구위원과 최지현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주제발표를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심포지엄이 끝난 후 우리 연구원 오세익 원장과 중국 농업경제발전연구소 친푸(秦富) 소장, 일본 농림수산정책연구소 사이토 노보루(齋藤登) 소장이 회동을 갖고 차기 심포지엄은 2010년 5월 중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의제로는 '농업분야의 저탄소 녹색성장', '경제위기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세계농산물 수급모형 구축' 등이 제안되었다. 또한, 동아시아의 농축산물 국제수급모형 개발에 대한 공동연구 추진과 연구 인력의 인적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결의하였다.

## 팀비전 및 발전전략 토론회



팀비전 및 발전전략 토론회를 3월 17일과 18일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연구원은 3월 17일과 18일 대회의실에서 팀비전 및 발전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직개편에 따른 팀제 활성화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팀별 임무 정립, 비전과 발전전략 수립, 팀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개최하였다.

연구부서는 3월 17일 농식품정책연구본부 농산업팀을 시작으로 식품·유통팀, 축산·환경팀 순으로,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는 농업구조팀, 지역산업팀, 농촌발전팀 순으로 발표했다. 글로벌협력연구본부는 북한·중국팀, 농업통상팀, 아시아농업연구센터 순으로, 농업관측정보센터는 농업정보화팀, 채소관측팀, 과일·과채관측팀, 축산·곡물관측팀 순으로 발표했다. 이어 산림정책연구실과 미래정책연구실이 발표한 뒤 강평회를 가졌다.

지원부서는 3월 18일 행정실 총무인사팀, 재무회계팀, 시설관리팀, 기획조정실 기획예산팀, 연구조정평가팀, 경영전략팀, 홍보출판팀, 지식정보팀 순으로 발표하고 강평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에서 연구부서는 팀 확대에 따른 팀워크 향상을 위한 제안과 비전을 발표하여 향후 팀제의 운영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다. 지원부서도 팀별로 업무 추진과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비전 및 발전전략 토론회를 통해 발표된 내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농업문제를 연구하는 언론인 모임

우리 연구원은 3월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쌀 관세화의 장단점'이란 주제로 일간

지 논설위원으로 구성된 농업문제를 연구하는 언론인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 오세익 원장은 오피니언 리더인 일간지 논설위원들이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개진해 주길 당부했다. 이어 박동구 선임연구위원은 '쌀 관세화의 현황과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표한 뒤 쌀관세화의 유희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네팔 농촌개발 담당자 대상 연수

연구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위탁을 받아 3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

20일간 네팔 농업 및 협동조합부 부국장 뉴파인(NEUPANE) 외 농촌개발 담당자 11명을 대상으로 교육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한국의 경제발전과 농업정책 변화, 농촌개발모형, 농산물 유통, 협동조합 등 우리나라의 농업, 농촌과 관련된 이론과 경험을 강의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기관도 방문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농촌개발 역사와 현장을 살펴 보기 위해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경북의 새마을운동 박물관과 세심마을 등 농촌 현지를 견학했다.

### 연구관계자 초청 연구결과 설명회

연구원은 기본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연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와 연구자, 언론인을 초청, 연구결과 설명회를 3월 4일부터 다섯 차례 개최했다.

처음으로 3월 4일 중회의실에서 '오리, 벌꿀, 산양, 사슴 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 연구결과를 설명했고, 3월 10일에는 대회의실에서 '친환경농자재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제도 개선', 3월 12일에는 중회의실에서 '신규취농의 진입장벽 해소방안', 3월 13일에는 중회의실에서 '농촌의 다문화가정 실태와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연구 관계자초청 설명회를 각각 가졌다.

## 일본 '채소 소비 전망', '가족경영' 주제로 KREI세미나



일본인의 채소 소비 전망을 주제로 3월 12일 KREI세미나를 개최했다.

우리 연구원은 3월 12일 중회의실에서 일본인의 채소 소비 전망을 주제로 KREI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일본 센슈(專修)대의 모리 히로시(森廣) 명예교수가 '신세대일수록 채소 소비가 감소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모리 교수는 일본인의 채소 소비가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하는 코호트(cohort)가 새로울수록 감소폭이 커져 미래 일본인의 채소 소비량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전

망했다.

지난 3월 18일 중회의실에서 일본동경대학원 다니구치 노부카즈 교수를 초청, '일본 가족경영의 분화와 다양한 경영주체'라는 주제로 KREI 세미나를 개

최했다. 다니구치 교수는 일본은 곡물자급률이 27%, 열량자급률은 40%에 불과해 국민들의 합의하에 자급률 향상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품목별로 수급구조에 차이가 있어 품목별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국가별로 각국의 풍토에 적합한 사료곡물자급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일본은 풍토에 적합한 작물이 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료용 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주인의식을 갖고 목표를 향해 진력하길

오 세 익 원 장

우리 연구원이 오늘로 어언 31살의 청장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연구원은 어려운 가운데도 농정과 농업경제연구를 통해 농정을 지원하는 일을 묵묵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직원 여러분의 탐과 수고가 정말 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이룬 성과에 만족하거나 안주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시장개방의 확대와 최근 불어 닥친 경제위기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농협개혁, 농업선진화 작업 등도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도전에 대한 능동적 대응

우리 앞에 놓인 이러한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조직을 개편하고 팀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각종 T/F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현장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연구에 반영하기 위하여 KREI리porter 151명을 위촉하여 4월 3일과 4일 천안에서 발대식을 갖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내발적 변화는 선제적 정책수요를 충족하고,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확대함으로써 정책기여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제가 원장으로 취임할 때 제창했던 비전, '도농상생과 상생협력,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연구원과 다섯 가지 추진 전략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 인력의 정예화·전문화 및 역량 제고를 위해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재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평가제도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에 부서와 팀 별로 발표한 비전 및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여 연구지원 체계를 혁신하고, 신바람나는 조직문화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을 명실상부한 농정연구의 허브로 만들기 위하여 각 대학 농업경제학과장 모임을 시작으로 지방

등 국내 우수 연구기관과 교류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와 실질적인 교류를 늘려가고 있고 개도국 농촌개발 정책 및 전략 연구 지원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이 모든 계획이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고 우리의 시대적인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하나로 뭉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어디서든 주인의식을 가지고 전력을 다하라)' 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주인의식이란 매사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수행하는 의지를 말합니다. 그 반대개념이 머슴 의식입니다. 우리 속담에 "주인 한 사람이 머슴 열 사람 못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은 어떤 일이든 자기 일이니 까 창의적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머슴은 단순히 월급을 받기 위해 주어진 일만 마지못해 합니다. 또한 주인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일을 하지만 머슴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합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에 성공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처음에는 식당종업원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식당의 청결상태나 손님접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 식당을 인수하고 나니 청결상태, 손님관리 등이 엉망인 것이 보이더랍니다.

주인의식의 구성요소는 소속감, 책임감, 열정, 애사심, 자긍심 등입니다. 이러한 의식을 가진 사람은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즉,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라는 자긍심, '이 일은 내일이다'라는 소명의식, 모든 일을 긍정적·적극적·열성적


으로 처리, 회사의 가치를 창조하고 보존, 공짜를 바라지 않고 무한책임의 태도를 지니는 것 등입니다. 과연 나는 지금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지 머슴처럼 일을 처리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주인의식은 모래를 금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의식 하나하나가 모아질 때 우리 연구원은 발전하고, 여러분은 존경을 받을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인 연구원 나주 이전문제도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중석몰축(中石沒鏹), 유지경성(有志竟成) 한다면 분명 길이 있을 것입니다. 중석몰축은 정신을 집중해서 온 힘을 다하면 화살로 돌도 뚫을 수 있다는 뜻이며, 유지경성이란 굳은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스스로 연구원의 주인의식 가져야

우리는 한 배를 탄 가족입니다. 개원 31주년을 맞아 그동안 이룬 성과를 토대로 우리가 세워 놓은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개개인의 다양성을 서로 존중하며 스스로 우리 연구원의 주인이란 정신으로 힘을 한 데 모읍시다. 이 힘으로 산적한 농업·농촌문제를 해결하여 우리의 고객인 정부와 농업인은 물론 도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연구원으로 발전해 가도록 늘 창의적으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생각 이상으로 훨씬 더 훌륭하고 위대한 연구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저력과 잠재력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 또다른 30년 후의 모습은 우리가 만들어 갑니다. 우리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미래를 창조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 쌀 관세화로 전환하면 수입량 줄어든다

박 동 규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는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는 수급 구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쌀협상에서 관세화유예를 선택한 반대급부로 매년 일정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 올해에 30만 7천 톤을 수입하고 매년 2만여 톤씩 늘어나 2014년에는 40만 8,700톤을 수입해야 한다. 관세화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2014년 이후에도 매년 40만 8,700톤을 수입해야 하므로 관세화유예의 비용이 적지 않다.

## 관세화 전환에 유리한 대외여건

대외여건을 고려해 관세화유예 기간 중에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관세화로 전환하면 의무수입량은 그 시점의 물량으로 고정된다. 관세화로 전환하면 관세화유예를 지속하는 경우보다 수입량이 줄어들게 된다. 2014년 한 해에만 10만 1천 톤 이상의 수입량이 줄어들 수 있다.

관세화로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에 두 가지 상반된 오해 혹은 입장이 대립한다. 국산쌀의 대외경쟁력이 취약하다는 믿음이 저변에 깔려 있으므로 생산자는 관세화에 대해 부정적일 수 있다. 누구라도 법에 정해진 관세만 부과하면 수입이 가능하므로, 수입량이 늘어나고 해당 산업이 위축되고 쌀농가 소득이 크게 하락할 것을 걱정한다. 한편 소비자는 양질의 쌀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

2004년에 관세화유예를 하였던 시점과 현재의 대외여건이 판이하게 다르므로 관세화로 쌀시장을 개방하여도 의무수입량을 초과한 수입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관세를 대폭 감축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시장접근 기회 확대를 표방하였던 DDA농업협상이 결렬되었다. DDA농업협상이 재개되어도 시장접근, 즉 관세 감축은 당초 우려하였던 수준보다 크게 후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당시 국제 쌀가격이 2009년에 톤당 371달러, 2014년에 366달러를 가정하였다. 환율도 달러당 1,100~1,200원에서 매년 0.5%~1.0%씩 하락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하지만 최근 국제 쌀가격은 톤당 1,10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상 이변의 영향으로 호주가 쌀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환되었다. 미국의 중단립종 재고량이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국제 중단립종 쌀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당 환율도 당초 예상보다 높은 1,300원이 넘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관세화로 시장을 개방하여도 의무수입량을 초과한 상업적 측면의 쌀 수입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오해에서 비롯한 불안감

국산쌀의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관세화로 전환하면 쌀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불안감이 여전하다. 작년에 판매된 밥쌀용 미국산과 중국산 1등급 도매가격이 각각 80kg당 12만 3,120원과 11만 8,960원에 형성되었다. 국산쌀 산지가격이 15만 원 정도이므로 수입쌀의 가격경쟁력이 있어 보인다. 이 수입쌀 가격은 국제가격에 저율관세 5%를 부과한 후 여러 가지 비용이 더해진 가격이다. 하지만 관세화 전환 후 국제 쌀가격에 부과할 관세상당치를 고려하면 수입쌀 국내 판매가격은 22만 5천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외산 간 쌀가격 차이가 크므로 수입쌀 수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관세화로 전환 후 쌀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므로 농가의 소득이 안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관세화로 시장을 개방하여도 추가적인 수입으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미약하다. 그리고 2004년에 도입된 쌀농가 소득보전직불제는 관세화유예를 하거나 관세화로 시장을 개방하는 경우의

쌀가격 하락에 대응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쌀농가가 불안해 할 이유가 없다.

## 합리적 의사 결정 필요

관세화로 쌀시장을 개방하였을 경우 쌀 수출국이 수출정책을 강화하여 국내 쌀산업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 관세화유예를 하다가 관세화로 쌀시장을 개방한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를 살펴봐도 그러한 우려감은 기우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일본과 대만은 각각 1999년과 2003년에 관세화로 전환하였지만 의무수입량을 초과한 수입은 미미하다. 일본은 의무수입량 이외에 연간 200톤 정도의 쌀을 수입하고 있으나, 수입쌀은 태국식당 등 매우 특수한 용도로 사용된다. 대만에서도 매우 소량이 수입되고 있을 뿐이다. 관세화로 전환한다고 해서 특정 시장을 겨냥하여 수입이 늘어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의무수입량 이외에 상업적 측면의 쌀 수입이 거의 안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국제 쌀가격에 관세상당치를 부과하면 수입쌀가격은 국내산 쌀가격보다 높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kg당 341엔의 종량세를 부과한 수입쌀 가격은 국내산보다 1.5~1.6배 정도가 높다. 대만도 수입쌀에 kg당 45대만달러를 부과한 수입쌀 가격은 국내산 가격보다 높다.

DDA협상의 결렬, 국제 쌀가격과 환율 급등 등의 대외여건, 우리나라에 앞서서 쌀시장을 관세화로 전환한 일본이나 대만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관세화 전환으로 오히려 쌀 수입량이 줄어들 수 있다. 관세화 전환이 정작 유리한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막연하고 불확실한 요인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합리적 판단이 어려워 질 수 있다. 관세화 전환이 지연될수록 국가적 비용이 늘어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신규 취농 활성화의 방향

마 상 진 부연구위원

많은 이들이 농업 인구의 고령화, 승계자 확보 농가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우리 농업인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을 한다. 그러나 최근의 관련 통계치를 분석해 보면 희망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된다.

### 신규 취농자 일만명 규모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와 농업총조사를 분석해본 결과 아직도 매년 일만여 명이 이르는 인력이 신규로 영농 분야에 유입되고 있었다(통계표 제시). 우리나라 농촌의 마을이 36,000여개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하면 모든 농촌 마을에 3~4년에 한명 꼴로 새로이 농업 종사자가 생기는 것이다. 더 고무적인 것은 이들 중 과반수는 앞으로 30여년 정도 영농에 종사할 여력이 있는 40대 이하의 젊은 층이라는 사실이다. 최근에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수가 다시 늘고 있는데 농업 인력 확보 측면에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상당수 신규 취농자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농촌을 떠난다는 데 있다. 필자가 관련 연구를 수행하면서 만난 한 귀농자에 의하면 IMF시절 해당 군내에 같이 귀농한 사람 중에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은 1/3 수준이라고 한다. 정착에 실패한 사람들의 수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신규 취농과정에서 이들이 많은 장애를 겪고 있다는 사실은 신규 취농자들을 현장에서 상담하는 전문가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형 연구와 현장 사례 조사를 통해 필자가 신규 취농자들이 취농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정리한 결과 농지, 영농 시설, 운영자금과 같은 생산 자본, 생산 기술이나 경영 역량과 같은 전문성 요인,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와 관련한 시장 요인, 그리고 생산 자본 마련, 전문성 개발, 시장 개

척 등과 인적 관계와 관련한 사회 네트워크 요인 등이 있었다. 그런데 이들 장애요인 간에는 상호 인과관계가 있어 사회 네트워크 요인이 자본 요인, 전문성 요인, 시장 요인에 선행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

각종 농지나 정책자금과 관련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마을의 이장, 농협 직원, 군청 직원 등과 같은 지역 유지 세력들과 소통하지 않고서는 정책자금이나 농지와 같은 자본 관련 장애요인을 해소하기가 힘들다. 또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과 같은 농촌의 각종 영농 생산자 조직에 가입하지 않고는 유통과 관련한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 혜택에 접근하기 어렵다.

### 사회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

생산 자본 관련 네트워크, 유통 관련 네트워크 조직은 농촌의 전문성 개발과 관련한 교육 또는 컨설팅 관련 정보처이자 서비스 제공 주체이기에 이들 조직과의 연계 없이는 전문성을 개발할 기회도 갖기 힘들다. 즉 농촌 지역사회의 근간을 유지하는 영농 관련 조직과의 연계가 없이는 신규 취농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뜻이다.

하지만 영농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러한 인적 관계가 아니라 시장 요인이나 자본 요인이다 보니, 신규 취농자들의 요구나 정부 정책의 초점은 문제 해결의 근원이 되는 사회 네트워크 요인이 아닌 자본이나 시장 요인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인이 개별적으로 경제적 자본, 전문성 개발기회, 시장 등에 접근한다면 소모적인 시행착오를 더 많이 겪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정착 실패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본, 전문성, 시장과 관련한 농촌 사회의 주요 인사와 원활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거나 관련 농업 조직의 가입을 통해 활발히 활동한다면, 농촌 사회

의 주요 인사나 조직이 이미 갖고 있는 농지 및 정책자금 등의 경제적 자본, 교육·훈련, 컨설팅, 학습 조직 활동 등의 전문성 개발 기회, 그리고 농산물 가격 정보 및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극대화 될 수 있다.

### 단계적 취농 준비 유도

앞으로의 신규 취농자를 위한 지원 정책은 경제적, 생산적 자본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신규 취농자들이 농촌 지역사회에 다양한 영농 관련 조직 가입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다른 직업 분야의 취업과 달리 취농이라는 것은 규모의 크기를 떠나 독립적인 경영주(CEO)가 되는 것이기에 단순 기술 이외에도 경영에 대한 마인드와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각종 투입재, 산출물에 대한 통합관리를 해야 하며, 판로를 해결해야 한다.

탐색·준비, 진입, 정착의 단계별로 차근차근히 순서를 밟을 필요가 있다. 탐색·준비 단계에서 품목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기초 농업기술을 습득하고, 준비·진입 단계에서 품목별로 요구되는 구체적인 고급 농업기술을 습득하고, 준비·진입·정착단계에 걸쳐 경영역량을 기르고, 진입·정착단계에서 취농 지역 특성에 맞는 암묵지를 기존의 지식과 기술에 보완하고, 이러한 철저한 준비 하에 어느 정도 전문성이 확보되면, 그동안 소규모나 임대로 운영하던 농장 규모를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 정책 방향도 무조건적인 유입보다는 준비 없는 취농에 대한 경각심 주입과 더불어 이들이 취농이전에 취농하고자 하는 장소, 생산하고자 하는 품목을 시범적으로 경험해보고, 연습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R**

# 또 하나의 거대경제권 EU와의 FTA 타결

최 세 균 선임연구위원

2년 가까이 진행되어온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과의 FTA 협상이 타결을 앞두고 있다. 한-EU 양국은 2009년 3월에 개최된 제8차 협상에서 관세환급 등 극히 일부 쟁점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여덟 차례의 협상을 통해 대부분의 협상 의제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상품양허 부분은 타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U는 27개 국가로 이루어진 거대 경제권으로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EU, 두 번째로 큰 수출 시장

우리나라는 2003년 8월에 EU를 미국, 중국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FTA 대상국으로 선정하였고, 그 이후 2007년 5월 공식 협상이 개최되기 전까지 다양한 방식의 예비 협상과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EU와의 협상은 우리나라가 2007년 4월에 미국과 FTA 협상을 타결하면서 한-EU FTA에 대한 EU의 협상 타결 의지가 강해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EU와의 협상은 미국과의 협상보다 두 배나 긴 2년 가까이 진행되었다. 이는 양국 간에 협상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동남아 10개국, 미국, EU 등과 FTA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거대 경제권과의 FTA는 중국, 일본 정도를 남겨 두게 되었다. EU는 우리나라의 두 번째로 큰 수출시장이며, 네 번째로 큰 수입시장이다. 수출로 따지면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고 수입으로 따지면 중국, 일본,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시장이다. 2007년 우리나라의 EU 시장에 대한 수출은 563억 달러, 수입은 368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9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EU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는 연간 50억 달러 수준으로 미국이나 일본을 크게 앞서고 있다. 따라서 EU와의 FTA는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EU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에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EU의 농업 경쟁력이 미국에 비해 낮고 한-EU FTA에서 우리가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품목 수도 미국과의 FTA에 비해 많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점이다.

## 주요 관심 품목, 돼지고기와 낙농품

우리나라와 EU의 농산물 교역은 수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 우리나라가 EU로부터 수입한 농산물은 18억 7천만 달러인 반면 수출한 농산물은 5천만 달러에 그치고 있다. EU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은 2000년에 9억 4천만 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 또한 같은 기간에 9억 달러에서 18억 달러로 두 배 증가하였다. EU와의 농산물 교역 상황으로 볼 때 한-EU FTA는 농산물의 수출 증가보다 수입 증가를 가져올 전망이다.

EU와의 FTA로 크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곡물류는 거의 없다. 쌀은 양허에서 제외되었고 보리, 옥수수, 대두 등은 EU의 경쟁력이 다른 수출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 FTA로 인한 수입 증가 가능성은 낮다. 채소류 가운데 고추, 마늘, 양파 등 중요한 품목은 현행관세가 유지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장개방은 없다. 따라서 채소류에 대한 수입 증가와 시장개방 피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과일류의 수입 가능성도 낮다. 따라서 한-EU FTA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문은 축산업으로 볼 수 있다.

농업분야 협상에서 가장 관심이 컸던 품목은 돼지고기와 낙농품이다. 돼지고기의 경우 EU로부터의 수입이 많은 냉동

삼겹살은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고 수입량이 비교적 적은 냉장육은 5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낙농품은 현행관세를 유지하는 대신 쿼터를 허용한 것에서부터 관세를 10년 또는 15년에 걸쳐 철폐하는 등 미국과의 FTA에서와 같이 다양한 양허방식이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쇠고기 시장도 개방될 것이지만 EU의 쇠고기 산업 경쟁력이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 비해 떨어지고 안전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 개방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돼지고기의 수입이 증가할 경우 돼지고기 가격이 낮아지고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쇠고기의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 축산, 효율적 대응과 선제 대책 필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EU와의 FTA에서도 축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어질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FTA에서도 축산부문이 민감한 부분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시장개방에 대비한 축산업 부문의 효율적 대응과 선제적인 대책이 특별히 요구된다.

국민경제 전반을 고려할 때 중국과의 FTA도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WTO의 DDA 협상도 대부분의 중요한 쟁점 사항은 정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부문의 경쟁력제고 대책, 소득보전 대책 등 정부가 가지고 있는 종합대책은 DDA 협상의 타결 여부나 한-미 및 한-EU FTA 등의 이행에 관계없이 계획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국가별 FTA 협상 때마다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미리 대비할수록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와 혼란도 덜할 것이다. EU 시장에 대한 농산물 수출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R**

# 미국, 영세 가족농과 대규모 경영으로 양극화 가속

김태곤 연구위원

미국은 5년마다 농업센서스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연도는 매 2년과 7년이며, 2007년도 조사결과가 지난 2월초 공개되었다. 전체 경영 수가 그동안의 감소에서 증가 추세로 반전하면서 대규모 기업적인 경영과 영세 가족경영으로 양극분해가 현저하다. 또한 농외부문에 종사하는 영세하고 젊은 계층의 신규진입이 늘어나 농외소득에 의존하는 영세 경영과 농업소득 중심의 대규모 경영이 상생하는 농촌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 영세한 가족경영과 대규모 경영으로 분화

미국에서 농장(farm)이란 농산물 판매금액이 연간 1,000달러 이상의 경영을 말한다. 조사연도에 1,000달러 미만이어도 통상 1,000달러 이상 판매로 간주되는 농장, 예를 들면 판매하지 않는 경우는 판매용 생산액이 1,000달러 이상 또는 판매액과 정부보조의 합계가 1,000달러 이상인 경영도 포함된다. 보전유보계획(CRP)이나 습지보전계획(WRP)에 참가하여 휴경으로 판매금액이 1,000달러 미만인 경영은 1997년부터 포함되었다. 농지나 노동력과 같은 투입요소가 아니라 산출물 기준의 성과주의에 의해 정의한 것이 우리나라와의 차이이다.

경영의 조직형태는 가족·개인(family or individual) 경영, 공동(partnership) 경영, 법인(corporation) 경영 등으로 구분된다. 공동경영은 복수의 개인이 토지·노동·자본 등을 분담하고 소득 분배에 합의하여 경영하는 형태이다. 주로 부자·형제 등과 같이 가족간의 경영이 대부분이다. 법적 지위는 가족경영과 동일하며, 가족경영이 발전하거나 규모화한 형태이다.

법인경영은 가족경영이 법인화한 '가족법인'과 일반회사가 법인화한 '일반법인'이 있다. 중서부지역의 일부 주에서는 일반법인의 토지소유와 농업경영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법인화하는 것은 상속에 의한 경영분할을 방지한다든가, 세대간 경영이양이 원활해지고, 금융기관의 신용력이 높고 세금을 경감할 수 있다는 면에서 가족경영이나 공동경영에 비해 장점이 있다.

가족·개인경영이 전체의 86.5%를 차지하고, 공동경영 7.9%, 법인경영이 4.4%(가족법인 3.9%, 일반법인 0.5%), 조합이나 협회 등의 기타경영이 1.3%를 차지한다. 공동경영이 대부분 가족으로 구성되고 법인경영의 90% 이상이 가족법인인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농업경영은 대부분이 가족경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동경영'과 '법인경영'은 증가하나 '가족·개인경영'은 감소하는 추세다.

2007년도 전체 경영 수는 220만 4,792호로 증가추세로 반전하였다. 경영당 평균 경지면적은 169ha(2002년 179ha)이고, 이 중 절반 이상이 방목지나 초지다. 경영주의 평균연령은 57세

(54세)이고, 경영당 평균 판매금액은 13만 4,807달러(9만 4,245달러), 정부보조가 9,523 달러(9,251달러)이다.

경지규모별 구조변화를 보면 중간계층(73~809ha)이 감소하는 대신 영세계층(73ha미만)과 대규모계층(809ha 이상)이 증가하였다. 대규모계층은 8만 393호로 전체 경영의 3.6%이며, 경영당 평균 경지면적은 2,500ha, 정부보조는 5만 230달러에 달한다.

판매금액으로는 1,000달러에서 25만달러 미만의 중간계층이 감소하고, 1,000달러 미만 계층과 25만 달러 이상 계층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특히 1,000~1만 달러 계층의 감소가 급격하다. 판매금액 1,000~25만 달러 계층은 정부 보조를 포함해도 확대 재생산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부 계층상승한 경영을 제외하고는 다수가 규모를 축소한다.

지난 5년간 신규취농은 약 29만 1,329호에 달한다. 21만 5,519호가 은퇴하여 7만 5,810호가 순증가한 셈이다. 신규취농은 평균 89ha의 영세규모에 다양한 작물을 생산하며, 비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많다. 신규취농이 늘어나고 있는 등 영세경영이 누적되고 있지만 소득은 안정적이다.

판매금액으로 1만 달러 미만계층을 '농촌거주형 경영'(rural residence farm)이라 한다. 전체 경영의 절반을 차지하며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영은 농촌 거주가 목적이며, 비농업부문에 종사하는 겸업종사자, 은퇴농업인, 취미농업인 등이 주류다. 농업소득은 낮으나 농외소득을 포함하면 평균소득을 상회하는 계층으로 농촌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 계층이다.

미국의 2007년도 가구당 소득은 농업경영이 8만 6,223달러로 전체 가구의 6만 7,609달러에 비해 28%나 상회한다. 농업소득이 10%, 나머지 90%가 농외소득이다. 이 중에서 '농촌거주형 경영'의 농업소득은 4,729달러 적자이나 농외소득이 9만 3,966달러, 총소득은 8만 9,237달러로 평균소득을 상회한다. 판매금액 25만 달러 이상 계층은 농업소득 13만 4,682달러, 농외소득 4만 4,543달러, 합계 17만 9,225달러에 달한다.

## 영세계층의 소득확보가 구조개선의 조건

미국 농정이 직접지불과 같은 정부보조가 대규모 경영에 집중하여 계층간 격차를 확대한다고 하여 비판을 받고 있지만 직접지불이 구조개선을 가속화하는 측면도 있다. 미국에서 구조개선은 영세계층의 소득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지 중간계층의 소득문제 해결이 과제이다. 양극분해 속에서도 한편으로 유기농업, 바이오연료 생산, 공동체지원농업(CSA) 등 다양한 형태의 농업도 확대되고 있는 것이 미국 농업이다. [R]

## 선임연구위원에 강창용, 박시현 박사



강창용 박사



박시현 박사

우리 연구원은 4월 1일자로 정기인사를 단행하고 선임연구위원에 강창용 박사와 박시현 박사를 승진·발령했다. 연구위원에는 김배성, 박기환 박사를 임명했고, 부연구위원에는 최병옥, 황운재, 김정섭, 이명기, 류영섭, 신완식, 이금선 박사를 각각 승진·발령했다. 1급관리원에는

성진석 2급관리원을 승진·발령했다.

이번에 선임연구위원으로 승진한 강창용 박사는 전북대학교를 졸업하고 전북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5년도에 연구원에 들어와 농자재, 농업기술, 친환경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고, 농림기술관리센터 평가팀장을 역임했으며, 2008년 11월부터 기획조정실장을 맡고 있다.

박시현 선임연구위원은 전남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석사학위, 일본 경도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5년에 연구원에 들어와 지역개발과 농촌관광 등의 연구를 하였으며, 농촌발전연구소장을 역임하였고, 최근에는 농촌발전팀장직을 맡고 있다.

### 연구진 동정

△ 김창길 연구위원은 3월 3일 강원대학교에서 열린 강원농수산포럼 세미나에서 '농업부문의 녹색성장과 강원도 농업의 대응'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네덜란드 와게닝겐대 주관으로 3월 10일 열린 기후변화 대응 국제컨퍼런스에서 '포스트 교토의정서에 대응한 농업부문의 전략'이란 제목으로 주제 발표했다.

△ 최세균 선임연구위원은 3월 12일 과천 그레이스 호텔에서 DDA/FTA 협상 포럼 주최로 열린 워크숍에서 '한·EU FTA 영향'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 송주호 연구위원은 3월 10일 농림수산

식품부에서 열린 DDA 이행계획서 작성방안 관련 회의에서 발표했다.

△ 김병률 연구위원은 3월 16일 충청북도 자치인력개발원생을 대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의 신농업 비전과 전략'이란 주제로 강의를 했다.

## 농식품부와 축산발전 정책과 농촌정책 현안 관련 워크숍 개최



농식품정책연구본부는 '축산 발전 정책워크숍'을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농식품정책연구본부 축산·환경팀은 3월 4일 과천 그레이스호텔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과 공동으로 '축산발전 정책워크숍'을 개최했다. 또한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는 3월 20일에 양평 KOBACO연수원에서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과 살맛나는 농촌구현을 위한 농촌정책워크숍을 개최했다.

3월 4일 열린 워크숍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의 이창범 단장과 축산정책팀, 축산경영팀, 축산물위생팀, 자원순환팀, 동물방역팀 팀장 및 팀원, 연구원의 박현태 농식품정책연구본부장과 축산·환경팀 연구진, 강원대학교 이병오 교수 등이 참석하여 주제발표와 토론을 하였다.

우리 연구원 우병준 부연구위원은 '축산분야 최근 이슈와 접근 방향'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우리나라 축산업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언급하고 주요 축종별 현재 이슈를 지적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노수현 축산정책팀장은 '축산분야 미래 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강원대학교 이병오 교수는 '축산정책의 진단과 평가'라는 제목으로 각각 발표했다.

주제 발표 후 토론을 통해 농림수산식품부 정책담당자들의 다양한 연구 수요를

△ 권오복 연구위원은 3월 27일 교육문화회관에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농림수산 R&D 워크숍에서 '농림수산식품 R&D 투자 확대와 효율화'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 이형우 초청연구원은 3월 26일 하이투자증권사가 주최하는 세미나에서 '육계산업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경청하고, 연구원의 축산분야 싱크탱크 역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과 향후 분기별로 진행될 정책담당자들과의 정기적인 모임 개최, 축산분야 포럼운영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3월 20일 양

평 KOBACO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는 우리 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연구자들과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공무원, 농어촌공사 관련 담당자, 학계 관련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현장 주민 등이 참석하여 주요 농촌정책 현안에 대해 7분과로 나눠 의견을 나눴다.

1분과는 농촌서비스 기준 마련과 달성수단, 2, 3분과는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에 따른 농어촌지역개발 추진체계 개편 방안, 4, 5분과는 농촌지역개발과 연계한 생산기반정비 발전 방안, 6, 7분과는 지역개발·도농교류·농어촌산업 정책 간의 관계 설정으로 주제를 정하고 발표와 토론을 하였다.

이날 워크숍은 주요 농정 현안에 대해 다양한 계층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형태로 진행되어 우리 연구원과 농림수산식품부 직원들에게는 농촌현장을 파악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향후 정례적으로 모여서 농촌정책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포럼이나 연구회 형태의 모임을 결성하는 작업을 우리 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가 추진하기로 하였다.